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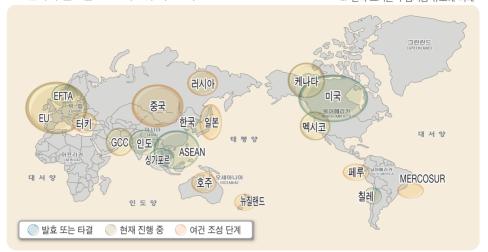
# 제1절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 1. 개관

정부는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 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다변화 등 선진 통상 국가를 향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양자·지역무역협정 체결 수의 증가 등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부터 FTA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08년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국 등 총 16개국과 FTA를 타결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오고 있다.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되고,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우리의 해외시장·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우리 경제의 경쟁력제고와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FTA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정부는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조기에 완성하고, 차세대 거대 경제권·자원부국·신흥경제권과의 FTA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8년에는 거대 선진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를 조속히 발효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EU와의 FTA 협상도 2009년 조기 타결·발효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차세대 거대경제권 중 최초로 인도와의 FTA 협상을 사실상 타결하였다. 또한 자원부국인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페루와는 FTA 협상 출범에 합의하고 제1차 협상을 2009년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호주와의 FTA는 협상 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



성 중에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 멕시코, ASEAN(투자) 등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등과의 FTA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 2.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완성

## 1) 한·미 FTA 비준 노력

### (1) 한·미 FTA 협상 타결 및 서명

2006년 2월 3일 공식 출범한 한미 FTA 협상은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3월 말 고위급 협상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 개최되었다.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20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됨으로써, 한미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양국 간 경제 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2) 주요 협상 결과 및 평가

상당한 준비 기간과 1년여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FTA는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품 분야에서는 9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해 양혀 제외, 현행 관세 유지, 농산물 세이프가 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개방 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 있는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세무) 개방 계획을 재확인하는 등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방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지재권,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 등에 있어서도 제도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의 대미 수출을 증대시키는 등 한·미 경제 관계를 크게 강화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효율성도 증대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미 수출은연평균 25.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간 실질 GDP는 6.0%(약 80조원), 대미 흑자는 4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발효를 위한 절차 진행

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비준·발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7년 9월 7일 17대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18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7월 1일 국무회의 의결과 7월 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쳤다. 10월 8일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월 12일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07년 9월 「한·미 FTA의 미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의회 심의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008년 11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등 정치·경제적 요인이 겹침에 따라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한 미국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비준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되어 하루빨리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긴요하다. 정부는 조속한 비준 과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 2) 한 EU FTA 협상 타결 기반 마련

세계 제1의 경제권, 우리의 제2의 교역상대국이자 제1의 투자국인 EU와의 FTA 협상은 2007년 5월 6일 만델슨(Peter Mandelson) EU통상담당집행위원이 방한, 김현종 당시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EU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개시되었다.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협상(2007. 5. 7-11)을 시작으로 총 7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그간의 협상 결과 핵심 쟁점은 상품양허, 관세환급, 자동차 표준, 원산지, 서비스 등으로 압축되었다. 특히 2009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통상장 관회담에서 양측이 전체 협상 타결을 위한 "합의의 틀"을 마련하였다.

EU와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부상하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미국보다평균 관세율이 높고, 특히 우리의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 한·EU FTA 확대수석대표회의(2008.8.28, 서울)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EU FTA 체결은 우리 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 혜택이 발생하고 우리의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미 FTA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의 GDP 증가가 예상된다.

## 3) 한·일 FTA 여건 조성 노력 계속

한·일 양국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우리 측 관심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해 협상이 중단되었다.

2008년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개최에 합의하였고, 2008년 중 총 2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FTA 협상 재개와 관련하여 협의를 지속했다. 제1차 협의(2008. 6, 도쿄)에서는 한·일 FTA의 원칙과 효과,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및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양측 간 의견 교환이 있었고, 제2차 협의(2008. 12, 서울)에서도 제1차 실무협의에 이어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계속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일본은 세계 제2위 선진 경제대국으로 첨단 기술과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과의 FTA는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본과의 FTA는 FTA 체결 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 나갈 것이다. 일본과의 FTA로 인해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부품소재 산업 등 우리 제조업 분야의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FTA 체결을 통해 양국 모두에 게 균형된 이익이 달성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일본과의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 3. 차세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 1) 한·인도 CEPA 협상 타결

우리나라와 인도 정부는 긴밀화되고 있는 양국 경제 통상 관계의 새로운 제도적 기본 틀로서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6년 3월부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해 협상한 결과 2008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양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목표하에 현재 CEPA 협정문 및 부속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CEPA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분야에 있어 양국은 경제발전 수준, 특히 제조업의 발전 상황을 감안한 시장개방에 합의하였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에서 상호 개

방하기로 하였다.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는 인도가 기체결한 FTA에서 보다 완화된 기준에 합의하였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WTO DDA 협상에



| 한·인도 CEPA 제12차 협상차관급회의(2008.9.24, 서울)

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하였고, 투자 분야에서는 1차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투자를 자유화했으며, 그 외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1억의 인구와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4위의 GDP를 보유한 인도는 최근 8% 이상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로서 급증하고 있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시 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4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CEPA 체결로 관 세가 철폐될 경우 23억 달러의 무역 수지 개선과 1조 3천억원의 GDP 증가가 예상되었다.

### 2) 한 중국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2006년 11월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종료 직후인,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에는 제1차 회의(2007. 3, 베이징), 제2차 회의(2007. 7, 서울), 제3차 회의(2007. 10, 웨이하이) 등 총 3차례 진행되었고, 2008년에는 총 2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4차 회의(2008. 2, 제주)에서는 정부조달, 지재권,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5차 회의(2008. 6, 베이징)에서는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의 농수산업 및 전체 결론·권고 부분에대해 논의하였다.

중국과의 FTA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큰 반면, 양국 간 유사한 농산물 작목 및 소비구조,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우리 농산물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앞으로 한·중 FTA의 협상 개시 여부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이 상호 이익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내 각계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3) 한 MERCOSUR FTA 여건 조성 노력

우리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이자 GDP 1.6조 달러, 인구 2.4억 명의 거대 신흥 시장인 MERCOSUR와의 FTA 체결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에너지·광물·식량 자원의 요충지이자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MERCOSUR와의 FTA 체결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도모를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남미 방문 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상과 한·MERCOSUR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sup>17)</sup>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4차례에 걸친 정부 간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06년 12월에 실질적으로 완료하였다.

2007년 10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제6차 한·MERCOSUR 정책협의회 계기에 한·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한·MERCOSUR 경제의 상호 보완성에 입각하여 FTA가 체결되면 GDP 증가율이 한국은 0.17~2.00%, MERCOSUR는 0.02~2.74%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전자제품, 휴대폰, LCD, 의약품 및 섬유, MERCOSUR는 쇠고기, 오렌지 주스, 대두 등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MERCOSUR FTA 여건 조성 노력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2008년 11월 한 · 브라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TA 공동연구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한·MERCOSUR 간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MERCOSUR와의 FTA 추진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MERCOSUR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우리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한·MERCOSUR FTA 협상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다.

## 4) 한·러시아 FTA 여건 조성 노력

한·러 양국은 2005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 간 서명한 「한-러경제·통상 행동계획(Action Plan)」에 의거 '한·러 BEPA(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공동연구그룹'을 결성하고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8년 7월 8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상품양허,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TBT), 무역구제 등 상품 교역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해 혐의를 진행하였다.

러시아와의 FTA 체결은 우리의 수출시장 확대뿐 아니라 에너지·자원·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up>17)</sup>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은 교역 확대를 위해 둘 이상의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자유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나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 구체적인 형태를 전제하지 않는다.

# 4. 자원부국 및 전략적 지역거점 국가와의 FTA 추진

### 1) 한·GCC FTA 협상 개시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간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서 중동 지역 최대의 경제권이다. 한국과 GCC 양측은 2008년 7월 9-10일까지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에는 제2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GCC는 2008년 기준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국으로, 수출 150.3억 달러(6위 수출국), 수입은 855.2억 달러(1위 수입국)에 달하며, 수입액 중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이 99%인 846.6억불에 달하고 있다(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7%, LNG 수입의 48%를 GCC로부터 수입). 2005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GCC FTA 체결 시 수출은 2.6억 달러(4.9%), 수입은 7.0억 달러(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2)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개시 여부 검토

2007년 진행된 한·호주 및 뉴질랜드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2008년에는 양국 간 FTA 추진 가능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였다.

2008년 4월 호주 및 뉴질랜드와 정부 간 라운드테이블회의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여 FTA 민간 공동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5월과 7월 뉴질랜드와 호주 총리 방한 시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추진 가능성을 지속 모색 해나가기로 하고, 9월과 11월에는 뉴질랜드와의 FTA 예비협의를, 10월과 12월에는 호주 와의 FTA 예비협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동 예비협의를 통해 FTA 협상 분야별 양국 간 기본 입장 및 주요 관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FTA 협상 개시 여부를 결

정하는 데 필요한 각국 의 국내 절차를 진행하 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2009년 1월 16일 한·호주 및 한·뉴 질랜드 FTA 추진에 대 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



| 한·호주/한·뉴질랜드 FTA 공청회(2009.1.16, 서울)

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 결과와 함께, 농축산업계 등 국내 민감 분야에 미칠 영향 및 부처간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호주 및 뉴질랜드 FTA 협상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 3) 한·페루 FTA 협상 출범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 칠레에 이은 FTA 선도국으로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찍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증진에 관심을 두고 이 지역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해오고 있다.

한·페루 FTA 협상 논의는 2005년 11월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양국 민간 기관이 FTA 체결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8년 11월 21일 APEC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한·페루 FTA 협상 출범에 공식 합의하였다.

최근 3년간(2005-2007년) 페루 경제는 연평균 8%의 고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페루 FTA는 중남미 경제의 떠오르는 블루칩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우리 기업의 중남미지역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한·페루 FTA는 페루의 풍부한 광물에너지, 농림수산자원, 생물자원 등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한·캐나다 FTA 협상 진행

캐나다와는 2005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8년 3월까지 13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다. 상품, 원산지, 서비스(금융, 통신, 인력 이동 포함), 투자, 정부조달, 노동 등 분과별로 양혀표 및 통합 협정문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지난 3년여간의 협상 결과 양측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향후 협상 타결의 관건인 소수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동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토대로 교역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민감 품목을 충분히 고려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5) 한·멕시코 FTA 협상 진행

멕시코와는 2007년 8월 기존의 한·멕시코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협상을 정식 FTA 협상으로 대체하여 재개한 이래 현재까지 2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제1차 협상(2007. 12. 5-7)에 이어, 제2차 협상은 2008년 6월 9-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정문 위주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협정문안을 최종 타결하기도 하였다. 차기 협상은 멕시코 측 국내 사정상 계속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한·멕시코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한·멕시코 FTA 체결은 우리 기업의 북중미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결과 GDP 0.03% 증가(단기), 0.55% 증가(장기), 수출은 6.8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한·멕시코 FTA 체결은 양국의 경제적 혜택의 확대뿐 아니라 양자 간정치·전략적 파트너십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6)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2008년 6월 한·터키 FTA에 대한 양국 간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하고 같은 해 9월 제1차 공동연구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제1차 회의 시 양측은 한·터키 간 교역·투자 현황, FTA 추진 현황 및 최우선적 산업협력 분야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한·터키 FTA 공동연구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터키 측은 유럽연합(EU)이 제3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터키도 동 제3국과 FTA를 체결하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EU·터키 관세동맹 규정에 따라 EU와 FTA 협상 중인 우리와의 FTA 체결을 희망해왔으며, 특히 양국 간 무역불균형(2007년 우리 측 흑자 38억 달러) 해소 방안으로 한·터키 FT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EU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두보적 위치에 있어, 향후 FTA 체결 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투자 진출을 위한 거점 및 중앙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도 기대할 수 있다.

## 5 다자간 FTA 논의에의 적극 참여

### 1) 한·중·일 FTA 민간 공동연구 진행

1999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출범된 것을 계기로 한·중·일 FTA 추진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3국의 연구기관들은 '무역원활화 방안' 및 '직접투자 확대방안'관련 제1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시대 구상에 기초하여 동 공동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2002년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제2기 연구의 첫 번째 과제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진행에 합의하였다. 연구수행기관으로는 한국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에서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그리고 일본에서 종합연구개발기구(NIRA)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민간 연구기관 주도로 시작한 한·중·일 FTA 민간 공동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의 전경련,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 일본의 경단련 등 업계 대표도 참여하였으며, 2007년부터 3국의 정부 관계자가 옵서버로 참여하는 등 연구의 참여폭이 확대되었다.

민간 공동연구는 워크숍(매년 2회)과 심포지엄(매년 1회) 개최를 통해 보고서를 확정하고, 연구결과를 연례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해오고 있는데, 2008년에는 최초로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가 2008년 12월 13일 일본후쿠오카에서 개최되어 동 계기에 지난 6년간 연구결과를 종합한 '한·중·일 3국 간 FTA 추진방향 – 문제점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중·일 FTA 민간 공동연구는 2008년도 연구를 통해 우선 지난 6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2009년부터는 보다 심화된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부터 일본 측의 참여기관이 종합연구개발기구(NIRA)에서 무역진흥기구(JETRO) 산하 경제연구소(IDE)로 변경될 예정이다.

## 2) FTAAP 논의 참여

1989년 APEC 창설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통합의 방안으로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가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FTAAP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4년 제2차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회의에서 보고르 목표(Bogor Goal)<sup>18)</sup>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FTAAP 창설 제안을 시작으로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시 장기적 과제인 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키로 합의하였고, 2007년 9월 시드니 정상회의에서 FTAAP의 실현 방안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통합 보고서(REI report)'를 채택하였다. 2008년에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페루와 공동으로「FTAAP 관련 기존 연구 분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년 지역경제통합 분야 주요성과의 하나로 평가받은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FTAAP 추진 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유의하며, 민간 기업 인들의 의견 및 회원국 간 정치·경제·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장기적 목표로 APEC 차원의 FTAAP 추진 필요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6. 기 체결·발효된 FTA 효과 극대화 노력

### 1) 한·칠레 FTA 이행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FTA로서 2004년 4월 1일 발효한 한·칠레 FTA는 발효 전 1년 (2003. 4-2004. 3) 교역량보다 발효 후 4년 차(2007. 4-2008. 3) 교역량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칠레 수출은 발효 전 1년 5억 달러에서 발효 후 4년 차에는 35억 달러로 600% 증가,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13억 달러에서 43억 달러로 230% 증가하였다. 또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우리의 대칠레 투자 역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한·칠레 FTA의 차질 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2008년 말까지 총 5차례의 자유무역위원 회(FTC: Free Trade Commission), 총 16차례의 FTC 산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발효 후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자유무역위원회 및 상품무역 위원회 외에도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Harmonized System) 상품분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양국의 양허표 개정 작업 관련 마무리 협의

<sup>18)</sup> 보고르 목표(Bogor Goal)는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APEC 정상회의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APEC 국가 사이에 무역과 투자 자율화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목표하였다.

\*\*\*\*\* 한·칠레 FTA에 따른 교역 증대 효과



를,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금융서비스 협상 개시 문제 및 투자 협정문 개정 관련 논의를 하였다. 자유무역위원회는 각 산하위원회를 통해 진전된 분야별 이행 상황을 점검·확인하는 한편, 양국 간 FTA 발효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 2) 한·싱가포르 FTA 이행

한·싱가포르 FTA가 2006년 3월 발효한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발효 전 134억 달러에서 발효 2년 차에 203억 달러로 51.2% 증가하였고, 우리의 대싱가포르 수출도 79억 달러에서 발효 2년 차에 131억 달러로 66%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 기간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은 28.6% 증가하는데 그쳐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는 23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151% 증가하였다. 당초 무관세 국가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의 관세 인하 효과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오히려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보다 월등히 커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싱가포르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률도 2005년 4.3%, 2006년 4.4%에서 2007년 4.9%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확대는 우리 제품의 국제

인지도 제고와 비관세 장벽 개선 등 FTA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양국 간 교역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다.

한·싱가포르 양국은 FTA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2007년 제1차 임시관세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정문 양허표상의 HS 코드를 2002 HS 코드에서 2007 HS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고, 2009년 1월에는 전체 이행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이행 상황 점검 및한·싱가포르 FTA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를 최초로 포함한 FTA 협정으로서,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EFTA, 한·ASEAN,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의 선례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 3) 한·EFTA FTA 이행

서유럽 강소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2006년 9월 1일 발효하였다.

발효 이후 교역액이 양측 간 교역액은 발효 전 1년(2005.9-2006.8) 36억 달러에서 발효 후 2년 차(2007.9-2008.8)에는 62억 달러로 70% 이상 증가하였다. 대 EFTA 수출규모는 발효 후 2년 차에 30% 이상 증가하였다. 다만, 대 EFTA에 대한 무역 역조현상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 가공무역 산업 구조상 필요한 공업용 기계류와 선박용 부품등 공업용 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리 심각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선박, 무선전화기, 금 등 일부 관세 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발생했으며, 수입 측면에서는 노르웨이산 선박용 부품을 수입하여 특수 선박을 제조한 후 노르웨이로 무관세 수출하는 사례가 있는 등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무관세로 재수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4) 한·ASEAN FTA 이행(상품, 서비스) 및 투자 협상 진행

## (1) 상품 협정

ASEAN 국가 중 태국을 제외한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7년 6월 1일 발효된 바 있다.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타결되고 원활한 이행이 시작되면서 한국

과 ASEAN 회원국 간 무역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협정 발효 후 1년간 우리나라의 대아세 안 수출은 협정 발효 전 1년과 비교해볼 때 24.9%, 수입은 20.9%, 총교역량은 23.0%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발효 후 10개월 동안, 자동차부품(131.5%) 및 자동차(59.3%)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FTA 발효 전 분석과 같이 자동차 산업이 최대 수혜 업종으로 나타났고,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63.1%), 석유제품(61.1%)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대 ASEAN 교역량이 90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ASEAN은 2007년 한국의 제5대 교역국에서 2008년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1,683억 달러)과 EU(984억 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2,1%) 일본(8,0%), 중국(16,1%), EU(6,0%) 등과의 교역 증가가 저조한 가운데 ASEAN과의 교역 증가율이 25.5%를 기록하면서 5개 지역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와 동시에 일반 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발효 즉시 수입 상품 63%가 무관세 혜택 향유)가 빠르게 진행되어 온 반면, ASEAN 국가들은 한국에 비해 자유화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ASEAN 국가들의 자유화가 진행되면 FTA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품무역협정 서명 당시 국내 정치 문제로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태국에 대해서는 양자 양허협상 타결(2007.12) 이후 가입의정서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중 태국을 포함한 전체 아세안 회원국과의 FTA 상품협정 발효 개시를 추진 중에 있다.

## (2) 서비스 협정

상품무역 협정 협상에 이어 순차적으로 협상이 시작된 서비스 협정 또한 2007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ASEAN 정상회의 계기에 국내 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불참한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과 한국 간에 서명된 바 있고, 현재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태국의 서비스협정 가입은 2009년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ASEAN 서비스 협정 타결로 서비스 개방 수준이 낮던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이 컴퓨터,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 분야에서 WTO 양혀 수준을 상회하여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이로써 향후 우리 기업의 대아세안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확대될 뿐 아니라, 2007년 6월 발효된 한·ASEAN 상품무역 협정을 통한 무역 자유화의 이익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투자 협정

한편 투자 협정의 경우 2008년 10월 개최된 제24차 전체 회의에서 한·ASEAN 양측은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우리 측이 제시한 일괄 타결안(package deal)을 중심으로 논 의하였다. 향후 한·ASEAN FTA 투자 협상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2009년 개최 예정인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제2절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 1 에너지 협력 외교 적극 추진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취약한 에너지 안보 여건에 비추어볼 때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러시아, 중앙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지역별·국가별 특성에 따라 산업·경제개발과 에너지·자원협력을 연계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에너지 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에너지 협력 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 정상급 외교의 활발한 전개 ® 기업 지원 활동의 강화 및 ® 에너지 협력 외교인프라 확충 등을 착실히 추진하였다.

## 1) 정상급 에너지 협력 외교 본격 실시

## ● 정상회담을 통한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하여 천연가스 연 750만 톤(2015년부터 30년간)을 새롭게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일본, 중국 방문 및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방한 시(11월)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자원 분야를 의제에 포함시켜 최고 위층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베이징 올림픽(8월)이나 APEC 정상회의(11월) 참석 계기에 중앙아, 중미 등 자원부국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 국무총리 자원부국 순방 외교 ■

한승수 총리는 2008년 5월 에너지 협력 외교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 3개국과 아제르바이잔을 순방하여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본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11-12월에는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2개국과 터키를 순방하였다. 총리 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국무총리실장, 지식경제부 장관, 에너지자원대사 등을 단장으로 한 사전조사단이 파견되었으며, 순방 이후에는 총리실과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었다.

## 2) 자원부국과의 포괄적 우호협력관계 강화

주요 자원부국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 및 전반적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한 ·아랍소사이어티 창립(5월), 실크로드 문화축전 개최(11월) 등 행사를 통하여 해외 자원개 발기업의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등 5개 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투르크메니스탄 등 2개국과의 항공협정 체결 등을 통해 자원부국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 3) 국제 에너지 협력 외교의 활발한 전개

2008년도 상반기에는 초고유가 대책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개최된 G8+3(한국, 중국, 인도) 에너지장관 회의 및 사우디아라비아 젯다 산유국-소비국 국제회의(각각 6월) 등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주요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80%를 의존하는 OPEC 회원국과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10월)하였다. 특히 정부 및 에너지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13년 세계에너지협의회(WEC:World Energy Council) 총회 한국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11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집행이사회의 2013년 총회 개최지 투표에서 대구시가 개최지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원 활동 구체화

## 1) 에너지 자원 관련 정보 수집 및 전파

우리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7개 자원부국에 관한에너지·자원 현황 보고서를 발간(7월)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각국 정책 사례집' 및

'에너지·자원개발의 이해' 책자를 발간(각 각 11월)하였다. 또한 에너지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해외 에너지·자원 정보 홈페이지 (www.energy.go.kr)를 개설(12월)하 였다.



| 외교부 해외 에너지 자원 정보 홈페이지

### 2) 자원개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외교적 지원 강화

재외 공관은 기업과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수시로 협조하여 이라크, 볼리비아 등 20여 개국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였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이라크 등에 20여 차례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체적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가스 48백만 톤) 및 가스화학플랜트(20억달러) 합작프로젝트,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동 연간 3-5만 톤) 등 원유·가스 분야에서 16건, 전략 광종 분야에서는 28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확보하였다.

## 3. 에너지 협력 외교 인프라 확충 및 역량 제고

## 1) 에너지 협력 외교 구심 체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효과적인 에너지 협력 외교 수행에 필 요한 외교통상부 내 구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에너지외교전략협의회'를 설치(3 월)하였으며, '2008년도 에너지외교 추진 전략'을 수립(5월)하여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에너지 협력 외교를 착실히 추진하였다. 또한 에너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 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협회와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11월)하였다.



| 해외자원개발협회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2008.11.12, 서울)

#### 2) 에너지 거점 공관 확대

주요 자원부국에 소재한 에너지 거점 공관을 32개에서 76개로 확대하여 에너지 협력 외교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에너지 거점 공관에 인력을 보강하였다. 또한 카메룬, 키르기스스탄, DR콩고, 볼리비아 및 이르쿠츠크 등 자원부국에 6개 상주 공관을 신설(6월)하였으며, 에너지 협력 외교 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여 개 공관에 현지인 공관장 에너지 보좌관을 채용하였다.



DIPLOMATI

#### ₩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최근 에너지안보와 기후온난화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처수단으로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통상부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자협력 증진과 이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1)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및 개정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현재 총 23개국(발효 20개국, 미발효 3개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UAE, 남아공 등의 국가와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문안 교섭을 진행 중이다. 2008년에는 요르단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일본 총리의 방한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973년에 체결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2012년 3월 만료 예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 미국 측과 개정 협상에 대한 예비 협의를 가졌으며, 2009년에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 2) 원자력협의회 개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원자력 국가와 원자력 협력 협정을 근거로 정례적으로 원자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프랑스(4월), 미국(10월), 베트남(10월), 일본(12월) 등과 협의 회를 개최하여, 양측 간 원자력 정책 및 공동연구, 안전, 방호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방안을 협의 하였다.

#### 3) 원자력 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위(원전 20기, 설비용량 1,772만 kW)의 원자력 선진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원전플랜트, 기자재 및 기술 수출 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중동, 유럽 지역의 잠재적 원전 수출 유망국에 대한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원자력 협력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 제3절 범세계적 환경문제 대응 외교

# 1.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외교

## 1)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국가 브랜드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 장을 새로운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국의 브랜드로 만들어 세 계 속의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인 전략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브랜드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1월 페루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 참가한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신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이자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을 양립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소개하였으며, 이에 앞서 9월







뉴욕에서 열린 제63차 유엔총회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가, 유엔 회원국에 저탄소 녹색 성장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등 다자무대를 통한 국가 브랜드화 노력을 기울였다.

9월 19일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본계획의 발표와 더불어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홍보키 위한 노력을 배가하였으며 아울러우리 전략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국의 유사한 정책을 수집 및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함으로써 우리 브랜드화 노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초청되었으며 이 명박 대통령은 동 회의에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설립하여 동아시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방안의 일환이며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역내 개도국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유엔 기후변화협상 대응

## 1) Post-2012 기후변화협상 현황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겸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이하 발리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협상(이하 Post-2012 기후변화협상)을 2009년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년 상반기부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발리회의에서 설치하기로 합의된 '유엔기후변화협약하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 반'은 2008년 중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50년까지의 범지구적 장기감축목표, 선진국의 중기(2020년) 온실가스 추가 감축목표 설정,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개도국에 대한 재원 및 기술 이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 논의를 위해 설치된 '선진국 추가 감축 특별작업반'도 역시 2008년 중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선진국의 추가 감축목표 설정 및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교토의정서상의 신축성 메커니즘(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개선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2008년 12월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제1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겸 제4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이하 포즈난회의)는 당초 발리회의에서 2009년 12월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코펜하겐회의로 가는 징검



| 포즈난회의(2008.12.28, 포즈난)

다리로 인식되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예상대로 선진국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대개도국 재원 및 기술 이전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개도국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선진국 간입장 대립이 계속되어 2009년 작업 일정과 방향을 합의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결의를 다짐하고 2009년 협상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포즈난회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 회의에서는 2009년에도 네 차례에 걸쳐특별작업반 회의를 개최(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추가 개최 가능성)하고, 12월 코펜하겐회의에서 채택할 협상문서(negotiating text) 초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리 2009년에는 협상 타결에 필요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정상 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8 정 상회의 계기에 16개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기후변화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 계기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주최로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개최 될 예정이다.

## 2) 우리의 대응 방안

우리나라는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 사회는 OECD 회원국이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Post-2012 기후체제 에서는 경제적 위상에 합당한 의무를 부담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주요 신흥경제국과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 축의무 수용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적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배출이 안정화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과 동일한 형태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되, 우리의 국력과 경제 여건에 상응하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자발적 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나가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조치로, 2008년 7월 일본 토야코에서 열린 G8 기후변화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명박대통령이 공표한 바와 같이 2020년까지의 자발적 중기 감축목표를 2009년 중 설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 설치, 개도국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로 감축 실적에 대해 거래 가능한 탄소 크레디트(carbon credit)를 부여하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 적용 등 건설적 제안을 제시하고 지지세를 확산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협상 타결에 기여할 예정이다.

## 3. 환경협력 강화

## 1)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동북아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빠른 경제 성장, 국가들 간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도 황사, 산성비, 해양오염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 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제11차 한·일 환경공동위원회를 통해 기후변화, 황사 등 월경 대기오염 문제, 해양쓰레기 문제 등을 협의하고, 갯벌 복원, 발전소 온배수 분야에서 내년 도 협력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8년 7월 제13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 황사 대응, 황해 보전, 환경 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 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 12개 공동협력 사업을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최고위급 논의의 장인 제1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가 2008년 12월 제주에서 개최되어 한·중·일 3국의 최근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3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탄소

사회구축, 황사, 화학물질관리, 환경보건정책, 전기전자 폐기물, 월경성 오염물질 등 지구 및 동북아 지역의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국제기구, 인접 국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황사방지 파트너십"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한·중·일·러 동북아 역내 4개국이 참여하는 제13차 북서태평양보 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정부 간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 하여 유독물질 해상 유출 긴급 대응 계획을 채택하고 NOWPAP 발전 중장기 추진 전략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NEASPEC 회원국들에게 회람하는 등 동북아 환경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제13차 NEASPEC 고위급 회의에 참가하여 동북아시아 6개국 간의 '황사 발원지에서의 조기경보체제 시범 사업'을 승인하고, 동북아시아 환경 정보 공유 필요성을 제의하여 동 문제를 향후 NEASPEC 주요 의제로 논의키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은 상기와 같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 편, 분야별로 산재된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 국제 환경협력 강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분야, 생태계 분야, 해양 분야, 유해폐기물 및 화학물질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대응을 위해 160여 개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들이 UN, 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태계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르(Ramsar)협약,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 계획, 화학 및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잔류성 유기오 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유해화학물질 사전 승인 통보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의 주요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폐기물

의 국제적 관리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 논의 및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0월 28일-11월 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를 개최, 전 세계 140여 개국 2,300여 명의 정부 및 비정부(NGO) 대표 등이 회원국과 환경 관련 국제기구, NGO 등 2,300여 명의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협약 사무국 및 참가자들로부터 내용, 조직 및 시설면에서 역대 어느 회의보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은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창원선언문'을 채택, 환경 선진국가로서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8년 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으로서는 처음으로 2008년 5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 참석,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 주최 동아시아 지역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는 등 LMO 관련 정보의 지역내 교류 및 개도국의 LMO관리 능력 배양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해양환경 분야에 있어 보다 강화된 전 세계적 협력에 동참하기 위해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사무국인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측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선진적인 해양환경 보존 국가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 제4절 선진 금융·통상 외교

# 1.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외교

## 1)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에 적극 참여 및 기여

선진국 금융위기의 여파가 신흥개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실물경제 침체가 가시화되는 등 전 세계적인 위기감이 고조되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 정책 공조와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 금융 시스템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정상급 국제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마침내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세계금융경제 정상회의' 가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 및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주한대사관을 통해



| G20 세계금융정상회의(2008.11.15, 워싱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장(場)으로 기존의 G20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정통 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방안임을 선진국들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G20 세계금융정상 회의가 출범하는 데에 중요한 산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1차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경기부양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 ◉DD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협력 등을 적극 제안하였으며, 우리의 제안이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고 정상선언문에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에 신흥경제국의 지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회원국 확대와 주요 선진국의 신흥경제국 과의 통화스왑 확대 등 신흥경제국의 금융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 우리를 포함한 신흥경제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다.

특히 2009년 G20 의장단(브라질, 영국, 한국)이 향후 워싱턴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조율하도록 결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동 회의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다. 현재 우리는 G20 의 장국단의 일원으로서 영국, 브라질 등 의장국과 기획재정부 등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런던 금융정상회의(2009. 4. 2, 영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하였다.

## 2) 국제 금융기구 참여 확대

신흥경제국의 대표 격인 우리는 향후 국제 금융감독체제 개선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및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FSF는 국제 금융 안정 도모, 금융기관 거래의 지도·감독 협조, 국가 및 국제 감독기구, 국제 금융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설립된 모임으로, 현재 G7국가 및 네덜란드,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12개국이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 3) 글로벌 경제 현안 논의에 대한 참여

#### ●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

G8 정상회의는 주요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공론의 장(場)이다. 2008년 7월 9일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G8확대정상회의' 는 G8국가 이외에 신흥경제국과 아프리카 14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등 14개초청국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 G8 확대정상회의(2008.7.7, 도야코)

환경문제, 아프리카 개발문제, 세계경제문제와 비확산문제 등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G8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의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고유가 등 세계경제의 긴급한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등 값진 성과를 얻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추진 등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문제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시켰다. 특히, 세계 경제의 가장 긴급한 현안인 고유가 대응 논의에서는 선도 발언을 통하여, '서 울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에너지 수요의 합리적 감축 모범사례로 소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G8,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세계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환담 등을 통해 우리의 정상외교의 폭 을 높이고, 특히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개 최하여 이들 국가와의 관계강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 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



| G8 확대정상회의(2008.7.7, 도야코)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활동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간경제 성장 촉진 및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 개도국에 대한 원조, 다자간 자유무역 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가하여 기후 변화, 곡물가 상승 등 세계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 OECD 분담금 개혁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였다.

나아가 2008년 12월 OECD 조선작업반회의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각국의 조선업 관련 정책 및 세계 조선업 시황을 파악하고, 신조선 협정 협상 절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관계 강화 의장직을 수임하여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OECD 규범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의 2009년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동 기구의 중견회원국으로서 기구 내 우리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세계경기침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되었다.

###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활동 ■

UNESCAP(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isa and the Pacific)은 회원국 수가 62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괄적인 정부 간 기구이다. 2008년 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64차 UNESCAP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총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의제 논의 및 결의안 채택 등 전체적인 총회를 주재하였다. 김종훈 본부장의 의장직 수임은 지난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7차 ESCAP 총회에서 당시 이상옥 외무장관의 의장직 수임 이후 두 번째로, 이를 통해 그간 ESCAP과 축적해온 기밀한 협력관계와 ESCAP 제1위 공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ESCAP 구조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통신 기술분야를 담당할 독립위원회 설립을 주도함으로써 우리가 인천에 유치한 아태정보통신 기술훈련센터(APCICT: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에 관한 고위급 원탁회의에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범아시아에너지 시스템(TAES: Trans-Asian Energy System) 구축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 세계경제포럼(WEF) 참석 ■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2008.6, 말레이시아)

의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는 세계 각국의 정(政)·관(官)·재계(財界) 인사들이 모여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참가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민간 포럼이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약 1주일에 걸쳐 정치·경제 및 문화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토론을 벌임으로써 주요 인사의 중대 발언이 나오기도하고, 참석자 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는 모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22-27일까지 다보스에서 열린 WEF에 참석하여 세계 주요 경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를 통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계 주요 지도자들에게 우리 경제를 다방면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미국 USTR 대표, EU 통상집행위원 등과 양자현안을 협의하고, IMF, 세계은행 등 세계기구 대표와 글로벌 경제 이슈를 협의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은 지역별 포럼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중동세계포럼과 6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on East Asia)에도 참석하여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적 에너지 안보 논의에 기여하였고, 2009년 6월에는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을 서울에서 유치하기로 합의하였다.

# 2.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관계

### 1) 한 미 통상외교

한·미 간 경제 교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 한·미 교역규모는 847억 달러에 달했으며, 현재 미국은 중국·EU·일본에 이어 우리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는 미국의 제7위 교역상대국(2008 기준)이다.

#### #### 2008년 한·미 교역 현황

수출/수입	수 출	수 입
	463.8억 달러	383.7억 달러
주요품목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철강제품 등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장비, 항공기 및 부품 등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08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46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철강제품 등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대미 수입액은 38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8.8%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 ### 2008년 한·미 투자 현황

	대미투자	대한투자
투자액	61.5억 달러	13.3억 달러
투자누계액	13.3억 달러 투자 누계액 316억 달러 (1968-2007)	403억 달러(1962-2008)

(출처: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해외 투자 대상국(누계기준)으로서 1968-2008년까지 대미투자 누계액은 316억 달러(신고 기준)로 우리나라 총 해외 투자액(1,632억 달러)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외국인 투자국<sup>(9)</sup>으로서 1962-2008년까지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403억 달러(신고기준)에 달한다.

<sup>19)</sup> 단일국 기준으로 1위, EU(512억 달러) 포함 시 2위

#### ♥♥♥ 한·미 교역 동향



₩₩ 한·미 투자 동향



한·미 교역 및 투자는 절대액 기준으로는 전반적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중국과의 급속한 교역 확대 및 미국 내 한국 상품 점유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세<sup>20)</sup>를 보이고 있다.

<sup>20)</sup> 전체 수출(수입) 중 대미 수출(수입) 비중은 2000년 21,8%(17,3%)였으나 지속 하락하여 2008년도에는 12,3%(10,4%)를 기록하였다.

한·미 간 경제의존도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sup>21)</sup>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이 2조 3,369억 달러<sup>22)</sup>에 달하는 거대 시장인 미국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우리의 입지와 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앞당긴다는 목표하에 미국과의 FTA 협상을 2006년 2월 3일 개시하여, 2007년 6월 30일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한·미 FTA와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양국 간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소해면상뇌증(BSE) 감염소가 발견된 이래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오던 미국산 쇠고기는 2006년 1월부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 재개가 허용<sup>23)</sup>되었다. 이후 2007년 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BSE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서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08년에 기술협의(4월)와 추가 협상(6월)을 거쳐 새로운 수입위생조건<sup>24)</sup>이 발효(6. 26)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동차,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여타 한·미 간의 주요 통상 현안들도 원만히 관리되고 있다. 특히 통상문제 협의를 위해 2006년 2월에 한·미 FTA 협상 출범 시 중단한 분기별통상현안점검회의를 비정기 협의인 '통상협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7년부터 개최해왔으며, 2008년에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USTR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3차례 (1.16-17, 5.21-22, 10.28-29)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 2) 한·일 통상외교

한·일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는 수교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어왔으며, 투자, 사회보장, 세관 분야 등 각종 분야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1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sup>&</sup>lt;sup>21)</sup> IMF World Economic Outlook : GDP 14조 3,340억 달러

<sup>&</sup>lt;sup>22)</sup> 미 상무부(Bureau of the Census): 2조 5,201억 달러

<sup>23) 2007</sup>년 10월 5일 등뼈 발견에 따라 미 쇠고기 수입 검역 중단

<sup>24)</sup> 즈오 내요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증명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까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sup>-</sup> 국내 검역 및 미도축장 현지 점검 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

<sup>- 4</sup>개 부위(뇌눈 척수 머리뼈)를 SRM(특정위험물질)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 차단

#### ###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교역 동향



여, 양국 간 교역액은 2008년 892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달성하는 등 확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는 일본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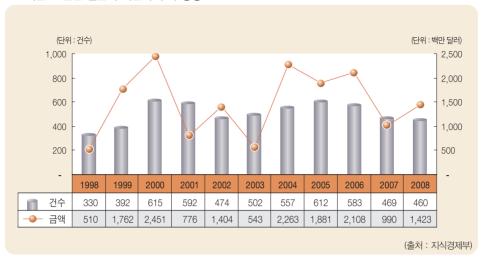
그러나 한·일 양국 간 교역에 있어 우리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무역 적자 규모가 처음으로 300억 달러대를 돌파하였으며, 2008년에는 327억 달러로 적자가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는 대일 무역역조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도록 국내 관련 정책 및 인프라를 조성하고, 무역 불균형의 주원인인 한·일 간 부품·소재 분야 협력 증진 및 일본의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 투자는 1999-2000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24.5억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도 일본의 대한 투자는 14.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누계 기준 일본은 제2위의 대한 투자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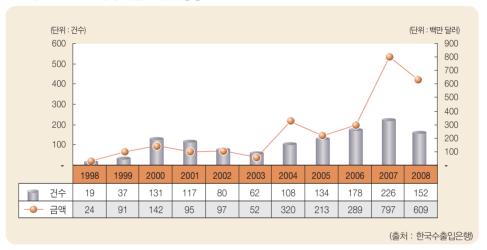
한국의 대일투자는 1990년대 이후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나 전반적으로 투자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6.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일 경제통상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2003년 12월 중단되었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2006년 12월 도쿄에서 재개하였고 매

**\*\*\*\*\*** 최근 10년간 일본의 대한국 투자 동향



#### ####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본 투자 동향



년 정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제7차 회의가 개최되어 미국발 세계 금융불안·고유가 지속·자원 및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4월 21일 일본을 처음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정상외교 활성화에 합의하였으며, 부품소재산업 분야 교류

강화와 중소기업정책 협의 개시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도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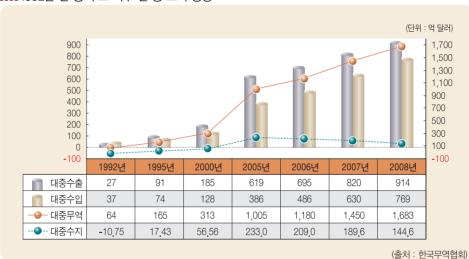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12일 방한한 아소 총리와 정상회담 하고 양국이 '미래 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 구축 등, 양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양국 간 현안 및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중소기업 CEO 포럼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과 우리의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을 위한 일 측의 지원 등 세계 금융위기 대응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3) 한·중 통상외교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2004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거쳐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되었다. 그간 한중 관계는 정치·외교·문화 등 제반 분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교역 동향



\*\*\*\*\* 한·중 교역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

	1992년	2008년	증가량(배)	
수 출	27	914	▲34.5	
수 입	37 -10.7	769	▲20.7	
수 지		144.6	_	
총 액	64	1,683	<b>▲</b>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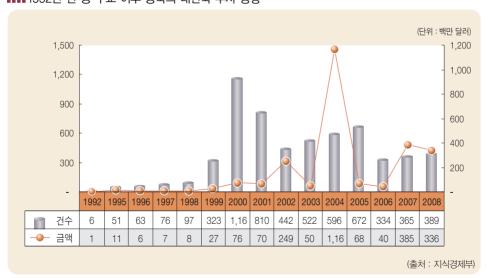
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투자 및 인적 교류를 망라한 경제분야 전반에 있어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한경제협력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다.

한·중 국가 간 교역규모는 1992-2008년까지 연평균 25% 수준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수교 당시의 64억 달러에서 2008년 1,683억 달러로 약 26.4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2003년부터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 2004년부터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우리는 2004년, 중국의 제3대 교역대상국(홍콩, 대만 제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08년 양국 정상은 2,000억 달러 무역액 달성 목표를 201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무역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중국무역수지 흑자는 2005년 233억 달러, 2006년 209억 달러, 2007년 190억 달러, 2008년 145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양국은 무역확대 기조하에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2008년 5월 27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동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00억 달러 무역액 달성 목표를 2010년으로 앞당길 것과.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 한중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FTA 추진, 환경보호, 에너지, 통신, 금융, 물류 등 중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8월 25일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투자면에서 중국은 2002년 이후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대 중국 투자 누계 규모는 2008년 19,355건, 382.7억 달러에 이른다. 인적 교류에서도 2005 년 425만 명, 2006년에는 482만 명, 2007년에 585만 명에 이르렀으며, 2008년 513만 명 을 기록하고 있다. 양국 간 항공 운항편수는 주간 830편을 상회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한·중 양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2008년 5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경제 통상 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2005년 11월 채택)」의 보완·수정 작업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양국 경제·통상 관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양국 간 통상 현안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양국은 정상회담, 통상장관회담, 경제장관회의 등 장관급 협의채널과 경제공동 위, 무역실무회담, 검사검역협의체 등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한편,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현안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중국 측과 의견을 조율하여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 및 고위인사 상호 방문,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확대·심화시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4) 한·EU 통상 외교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구 4억 9천5백만 명(2008년 기준)의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한-EU 통상관계도 양적 증가와 아울러 질적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의 교역 파트너이자 제1위의 대한국 투자국이며, 우리는 EU의 제8대 교역 대상국으로, 양자 간 통상·투자 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 이러한 교역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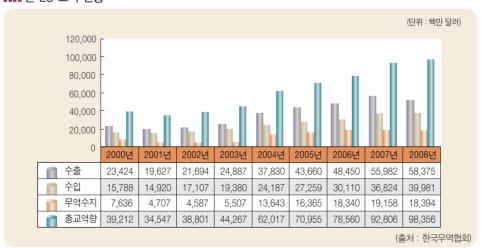


#### ₩ 2008년 11월 기준 한·EU 교역 규모는 92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11.5%를 차지

- 한국의 대 EU 수출은 983억 달러(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구조물 등 중심)
- EU의 대한국 수출은 372억 달러(반도체용 제조장비,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등 중심) 입장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

양측 간 교역규모는 2001년 이래 2007년까지 연평균 18% 수준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또한 2001년 당시 47억 달러에서 2007년 191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양측 간 교역규모나 무역수지가 전년 도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FU 교역 현황



한·EU 간 투자 측면에서도 EU는 누계 투자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 주체로서, 2008년 9월 기준으로 총 누계 투자액은 약 51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 EU 누계 투자규모는 약 19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EU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건), 총신고수리기준)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누계('62~'08)
EU의 대한국 투자	3,054	1,680	3,073	3,008	4,780	4,970	4,331	6,333	51,153
한국의 대 EU 투자	2,247	1,250	297	735	671	2,723	2,847	3,041	19,807

(출처: 대한투자-지식경제부('62~08), 대EU투자-수출입은행('62~08) 3/4분기 반영)

양측 간 경제 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 에 따라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한·EU 양측은 2006년 2차례의 FTA 예비협의를 거쳐, 2007년 5월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08년 말까지 총 7차례의 정식 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진행하여왔다.

우리 STX사의 노르웨이 아커야즈(Aker Yards) 크루즈제조社 인수에 대한 EU집행위 반독점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원한 결과, EU 집행위의 최종 인수 승인을 획득(2008.5.5)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내 조선업계의 미래 성장동력인 크루즈선 분야 진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EU 측이 1998년 7월부터 우리의 화장품 수입 및 유통 제도에 대한 TBR(Trade Barrier Regulation)<sup>25)</sup> 조사를 개시한 이래 EU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합의, EU측은 2008.9.20 TBR을 종료하게 되었다.

정부는 EU와의 FTA를 통한 경제관계 증진에 걸맞게 정치분야에서도 한-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한-EU 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된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sup>26)</sup>

또한 한-EU 기본협력협정에 따라 양측은 2001년부터 매년 서울과 브뤼셀에서 공동위를 번갈아 개최하여 경제 동향, 양자 간 통상 현안 및 정책,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7차 한-EU 공동위가 2009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sup>25)</sup> TBR(Trade Barrier Regulation): EU 집행위가 유럽산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질의서 발송, 직접 방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조사하고, 동 조사 결과에 따라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sup>26) 1996</sup>년 체결된 한-EU 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은 정치·경제·통상·문화·괴학기술 등 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2001년 4월 발화) 양자 간 협력의 기본 틀이 되어옴, 2007년 4월 EU는 한-EU FTA 출 범 계기에 양자 간 전반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동 협정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양측 간에 개정 협상이 진행 중

정부는 EU 내 개별 회원국과도 다자회의 계기를 통한 정상급 양자회담뿐만 아니라, 유럽 정상의 방한을 포함한 양측 인사 간 교류, 각종 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 해나가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G8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통해 대유럽 정상급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경제 공동위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하여 통상현안 및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여 여러 성과가 도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써, 2008년 10월에 한·프랑스 간 취업관광사증협정(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하였고 이를 통해 매년 2,000명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최장 1년간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상대국의 언어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서 양국 간 인적교류 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한·아일랜드 간에도 취업관광사증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 5)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양자적 대응

WTO 다자간 무역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외국 정부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수입규제조치는 조사 개시만으로 수출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우리 제품에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이 부과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관련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업계 자체적으로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직접 접촉·대응하여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는 2000년 9월 지역통상국 산하에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였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외국 규제 당국과의 양자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 및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를 담은 정부입장서를 관계국에 제출해왔으며, 필요 시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업계 및 정부 입장을 전달하며, 양자 고위급 회의 시수입규제와



#### ❸ 수입규제대책반의 주요 활동

- 수입규제 조사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수입규제 조사 개시 이전, 조사 중, 예비 판정, 확정 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하여 관련 업계 및 협회 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 업계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측 대응 논리를 구성
- 수입규제국과 정부 간 양자 협의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정부 간 양자 협의를 갖고 우리 업계 및 정부 입장 을 전달하고 혐조 요청
- 서한 및 정부 입장서 전달
  주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서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

2008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총 115건이며 이 중 반덤핑 조치가 101건, 상계관세 조치가 1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모두 문제가 된 경우는 4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9건으로, 수입규제조치에서 반덤핑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상계관세는 정부가 해당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이지만 반덤핑의 경우, 개별 기업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했느냐의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반덤핑조사에서도 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 조사당국에 분명히 함으로써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양자교섭 및 업계·공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얻어진 수입규제 대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2005년 5월부터 문제가 되어온 EU의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조사 사례를 들 수 있다. 수차례의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및 양자 협의, 한·EU 통상장관회담을 통한 고위급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서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EU 시장점유율관 1위인 우리 기업들의 양문형 냉장고 및 3도어 냉장고가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규제대상에 포함된 일부 양문형 냉장고의 확정 관



<sup>&</sup>lt;sup>27)</sup> 우리 업체 EU시장 수출액: 2005년 수출액 4.9억 달러(EU 시장점유율 18.5%), 2006년 4.3억 달러(EU시장점유율 15.8%)

세율(각각 3.4%, 12.2%)이 잠정관세율(각각 9.1%, 14.3%)보다 대폭 감소되었다.

또 다른 수입규제 대응 성공사례로 2007년 11월 인쇄용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서의 피해 무혐의 판정을 들 수 있다. 동 사안에 대응함에 있어 정부는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한·미 간 통상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한 협의, 정부입장서 제출등 적극적인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여 한국산 인쇄용지가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2007,11,21)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2003년부터 미국(2003.6), EU(2003.8), 일본(2006.1)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차례로 상계관세를 부과받아온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정부 대응도 성공적인 수입규제 대응 사례 중 하나이다. 정부는 수차례의 수입규제 대책반 파견 및 협의, 통상장관 회담 등 정부간 협의와 WTO 제소 등을 통해 하이닉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는 우리 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그 결과, 2008년 4월 EU는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 중 최초로 상계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였으며 미국도 2008년 9월 상계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조치에도 정부가 적극 대응하여 WTO 분쟁에서 승소판정(2007.12.17)을 도출하였으나, 2008년 8월 일본 정부가 상계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27.2%→9.1%) WTO 판정을 이행함에 따라, WTO 이행 패널 절차를 통해 상계관세 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 연도별 수입규제 건수 추이



이 밖에도 삼성, LG의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덤핑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다른 중국 및 터키 냉장고는 100% 내외의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도 삼성, LG 냉장고는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최근생산비 절감을 위해 우리 기업이 중국 등 제3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제3국 공장 수출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수입규제조치와 같은 보호무역조치는 국제 경제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 세계적 실물경기 위축이 2009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입규제조치를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입관세 인상, 반덤핑 조사 다수 개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도 경쟁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거나 유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선제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 일본, 미국, EU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보호무역조치 발동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혐의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부과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조기 종결 또는 조치 완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주요국의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단위 : 건수, 2008년 말 기준)

순 위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1	인도	23(6)	0	0	2(1)	25(7)
2	중국	20(2)	0	0	0	20(2)
3	미국	12(2)	0	4	0	16(2)
4	터키	6	0	0	0	6
5	EU	6(1)	0	0	0	6(1)
6	남아공	4	0	0	1	5
7	러시아	1(1)	0	0	4(2)	5(3)

※ 괄호 안의 수치는 현재 조사 중인 건수

■■■ 국가별·분야별 수입규제 현황

국 가	화학	철강	섬유	전기전자	기타(기계/제지 등)	합 계
인도	16	2	3	2	2	25
중국	15	0	1	1	3	20
미국	2	12	1	0	1	16
터키	1	0	5	0	0	6
EU	2	2	1	1	0	6
남아공	2	2	0	0	1	5
러시아	1	3	0	0	1	5

#### 6)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통상 분쟁 대응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역 상대국들과 수많은 통상 분쟁을 치러왔고,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 상대국과의 통상 분쟁에 대처하여왔다.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는 WTO 분쟁해결절차(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에 따라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였으며, 상대국으로부터 우리의 조치에 대해 제소당하는 경우에는 본 절차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제도가 WTO 규범에 기초한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왔다.

1995년 1월 WTO 출범 이후 2008년 12월까지 우리나라는 제소 13건, 피소 11건 등모두 24건의 분쟁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며, 이 중 패널이 설치된 16건의 분쟁에서 12승 4패를 기록함으로써 승소율 75%를 달성하고 있다.

2007년 '한·일 하이닉스 반도체(DRAMs) 상계관세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최종 승소하였으나, 일본은 2008년 8월 29일 하이닉스 DRAMs에 대한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27.2%에서 9.1%로 감축하는 데 그쳤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WTO 판정의 성실한 이행이 아니라고 판단, WTO 분쟁해결기구에 다시 제소하여 2008년 9월 23일 이행 패널이 설치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이행 분쟁'에서는 우리 무역위원회 관련 조치의 일부 절차적 흠결이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덤핑마진 등 주요사항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 측 입장이 관철되었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절차적 흠결 지

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계기도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이익이 직접 침해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가 있는 타국 간의 통상 분쟁에 제3자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였다. 2008년도에는 EC-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미-보잉 항공기 보조금 분쟁, 미-새우 반덤핑 분쟁 등에서의 제3자 참여를 완료하였고, 현재 10건의 타국 간 분쟁에 제3자로 참여하여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우리의 통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침체와 수요급감으로 인하여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조치 경향이 대두됨에 따라, 외교통상부 내에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 Task Force를 설치하고 WTO 제소 대책 반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외 관련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와 제소 실익,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호무역조치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 시 WTO에 제소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무역조치로부터 우리의 통상 이익을 지켜나갈 것이다.

## #### 우리가 당사자인 WTO 분쟁 현황표

우리가 당사사인 WIO 문생 연왕표								
	분 쟁 명	분쟁 상대국	우리나라	현 황				
현재 진형	행 중인 분쟁							
DS336	일본 DRAM 상계관세	일본	제소	패널설치: 2006.6.19	상소통보: 20	람: 2007.7.13  007.8.30  람: 2007.11.28		
DS312	인도네시아 제지 이행 패널	인도네시아	피소	패널설치: 2007.1.23	최종보고서 호	람: 2007.9.28		
패널/상	소 단계에서 해결 -							
DS323	일본 김 수입쿼터	일본			006.1.20	사실상 승소		
DS299	Hynix DRAM 상계관세	EU		패널보고서 채택: 200 - 패널설치: 2004.1.23		부분 승소		
DS296	Hynix DRAM 상계관세	미국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 패널설치: 2004.1.23	3	상소심 패소 (패널 승소)		
DS301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EU의 TDM 제도)	EU		패널보고서 채택: 200 - 패널설치: 2004.3.19		승소		
DS251	철강 세이프가드	미국	제소(9)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 패널설치: 2002.6.14		승소		
DS217/ 234	Byrd 법안	미국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양허정지승인: 2004. - 패널설치: 2001.8.23	11)	승소		
DS202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미국		패널/상소 보고서 채택 - 패널설치: 2000.10.2		승소		
DS179	스테인리스 반덤핑	미국		패널보고서 채택: 200 - 패널설치: 1999.11.19		승소		
DS99	DRAM 반덤핑	미국		패널보고서 채택: 199 - 패널설치: 1998.1.16		승소		
DS312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인도네시아		패널보고서 채택: 200 - 패널설치: 2004.9.2		승소		
DS273	한-EU 조선 보조금	EU		패널보고서 채택: 200 - 패널설치: 2003.7.21		승소		
DS163	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미국		패널보고서 채택: 200 - 패널설치: 1999.6.16		승소		
DS161/ 169	쇠고기 수입규제	미국, 호주	피소(6)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 패널설치: 1999.5.26 - 이행 종료: 2001.9		패소		
DS98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EU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 패널설치: 1998.7.23 - 이행 종료: 2000.5		패소		
DS75/ 84	주세 분쟁	EU, 미국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 패널설치: 1997.10.16 - 이행 종료: 2000.1		패소		
양자 협약	의 단계에서 해결							
DS307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TDM 이외의 조치)	EU	게시(2)	협의요청: 2004.2.13, 2004.7.23 양자협의 후				
DS215	합성섬유 반덤핑	필리핀	제소(3)	협의요청: 2000.12.15				
DS89	컬러TV 반덤핑	미국		협의요청: 1997.7.10	조치철회: 19			
DS41	농산물 검사/검역	미국		협의요청: 1996.5.24		(1996년 이후)		
DS40	통신장비 조달제도	EU	=1.4 (5)	협의요청: 1996.5.9	양자합의: 19			
DS20	먹는샘물 수입제도	캐나다	피소(5) 	협의요청: 1995.11.8	양자합의: 19			
DS5	식품유통기한	미국		협의요청: 1995.5.3	양자합의: 19 1시사 조경			
DS3	농산물 검사/검역	미국		협의요청: 1995.4.4	시크성 공결	(1996년 이후)		

# 3.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참여

#### 1) DDA 협상 경과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에서 공식 출범한 이래, 추가적인 시장 개방 및 보조금 감축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그간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 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에 대해 미국, EU와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선진·개도국 간 입장 대립으로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겨 8년째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실패, 2004년 8월 기본 골격(일명 July Framework) 합의,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개최, 2006년 7월 협상 일시 중단, 2007년 1월 다보스 소규모 각료회의 계기 협상 재개 등 부침이 있었고, 2008년 중 DDA 협상은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자유화 세부 원칙<sup>26)</sup> 잠정 타협안 도출, 5차례에 걸친 의장 수정안 배포 등을 거쳐 상당 부분 쟁점을 해소하며 진전이 있었다.

한편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DDA 협상 세부 원칙 연내 타결에 대해 정상들의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어 페루리마에서 2008년 11월 22-23일까지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별도성명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 부분 협상을 진전시킨 후 연내에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세부 원칙을 타결할 목적으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협상을 가속화하였으나, 공산품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 등 잔여 핵심 쟁점에 대한 미국, 중국, 인도 등주요 관련 국가 간 이견 해소에 실패하여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DDA 각료회의를 연내에 개최하지 않기로 2008년 12월 12일 결정하였다.

<sup>28)</sup> 자유화 세부 원칙(modalities)이란,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 공식, 보조금 감축 공식 등을 포함하는 양혀표 작성 원칙으로, 세부 원칙이 합의되면 회원국은 이에 따라 시장개방계획서(양하표)를 작성하게 된다.

#### 2) 우리의 활동 성과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서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양자·다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고위관료 및 각료급 양자회담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농업, 비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규범 등 협상 전반에 걸친 균형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 확보에 대한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G20 세계금융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에서 DDA 특별성명 채택에 기여하는 등 다자무대에서도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08년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대표 단을 파견하였다. 동 각료회의에서는 30여 개 WTO 주요 회원국 각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 원칙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협상이 급진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핵심 이익을 상당 부분 반영시켰다. 개도국 특별 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sup>29)</sup>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일부 국가간 의견 대립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지만, 동 회의 기간 중 잠정 타협안에 대한 상당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FOCUS

DIPLOMATIC

#### ₭ 잠정 타협안 주요 내용

#### ■ 농업

- 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감축률을 적용(개도국은 33~47%)
- 낮은 관세감축률을 적용받는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농산물 관세 세번의 12%를 허용, 이 중 전체 관세 세번의 5%에 대해서는 감축 완전 면제
- 모든 회원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민감 품목은 개도국의 경우 세번의 5.3% 허용
- 민감 품목과 특별 품목은 관세 150%(개도국) 이상 허용(단, 민감 품목에 대하여는 보상 필요)

#### ■ 비농산물 시장 접근

- 선진국의 관세는 8% 이하로 인하
- 개도국은 20%, 22%, 25% 이하로,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관세를 인하
- 주요 국가들은 최소 2개 분이별 자유화 협상에 참여,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개도국은 계수를 상 향조정하여 감축률 완화

<sup>29)</sup> DDA 협상에서 개도국만을 위해 구상된 제도로서,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할 때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회의기간 중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여타 주요국 각료들과 별도로 면담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였다



| 7월 각료회의 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면담(2008.7, 제네바)

또한 우리는 각 분야별 협상

에서 공조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우리의 입장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농업협상에서는 수입국 그룹 및 개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과 서비스 협상에서는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규범 협상에서는 무역자유화를 훼손하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 개정을 주장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공조 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더하여 국내적으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해집 단과의 협의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국민 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3)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1) 농업

DDA 협상 연내 타결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 속에서 농업 협상은 2008년 상반기 중 자유화 세부 원칙(modalities) 합의 도출을 목표로 팰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 협상그룹 의장 주도하의 회원국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8년 2월, 5월, 7월 세 차례에 거쳐 세부 원칙 수정안이 회람되었다. 특히 7월 배포된 제3차 수정안은 7월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으로, 회원국 간 기술적 쟁점을 상당부분 해소한 것이었다. 7월 각료회의 잠정 타협안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농산물 전체품목의 5%에 대해 관세 감축을 완전 면제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고율관세(150% 이상)를

유지토록 허용하는 등 개도국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7월 각료회의 실패 이후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연내 세부 원칙 합의 도출을 목표로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9월 중순 주요 7개국<sup>30</sup>의 대표들이 모여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잔여 쟁점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데 이어, 10월부터 의장 주도하에 잔여 이슈별 고위급 소규모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분위기가 반전될 만한 진전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11월 금융위기로 인한 각국 정상들의 DDA 타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표명되면서, 7월 각료회의 및 그 이후의 협상 진전 사항을 반영한 의장 문서 제4차 수정안이 2008년 12월 6일 배포되었다.

우리나라는 핵심 이익 확보를 위해 수입국 그룹인 G10<sup>31)</sup>과 개도국의 특별대우에 대해 입장이 같은 G33<sup>32)</sup>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 협상에 적극 참여 해왔다. 그 결과 의장 제4차 수정안에 개도국 특별 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장치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얻었으며, 향후 진행될 협상에서도 이를 토대로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2008년 1월 중순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비농산물 시장접근 회의에서는 2007년 7월 회람된 자유화 세부 원칙 초안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양 진영이 관세감축공식<sup>33</sup>을 적용하는 관세감축수준과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등 핵심 이 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스티븐슨(Don Stephenson)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은 2008년 2월 세부 원칙 제1차 수정안을 회람하여 초안에 비해 관세감축 수준 범위를 확대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t_{t}=rac{-A \times t_{o}}{A+t_{o}}$$
 A: 계수,  $t_{o}$  = 인하 전 관세율,  $t_{t}$  = 인하 후 관세율

관세감축공식의 계수(A)는 관세 상한 기능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식의 계수가 8일 경우, 비농산물 품목의 관세율은 8% 이하로 낮아진다. 2008년 7월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은 계수 8을, 개도국은 계수 20, 22, 25 중 한 개의 계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sup>30)</sup>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 브라질, 중국

<sup>31)</sup> G10은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농산물 수입국 그룹이다.

<sup>32)</sup> G33은 우리나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 품목(Special Product) 공조 그룹이다.

<sup>33)</sup> 관세감축공식은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이라고도 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은 이래 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한다.

관련 주요 숫자를 공란으로 제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활발한 협상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미국, EC, 인도, 브라질 등 주요 회원국들의 협의 결과, 관세감축 수준과 신축성을 연계하는 방식이 2008년 5월 제시된 제2차 수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개도국특별대우 사용 시 특정 품목군의 전체 배제 불가 조항의 구체화,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주요 7개국 간 협의와 소규모 그룹별 협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잠정 타협안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감축 수준과 개도국 특별대우를 구체화하고, 개도국 특별대우 사용 시 특정 품목군의 전체 배제 불가 조항의 구체 숫자를 제시하며, WTO 회원국들의 분야별 자유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개도국에 대한 관세감축률 완화 조항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이 분야별 자유화 참여와 관련하여 유보적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비농산물 시장접근 자유화 세부 원칙에 대한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이후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2008년 10월 2일 바세샤(Luzius Wasescha) 스위스 대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의장 주도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8년 12월 중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에 대비하여 배포된 제4차 수정안은 7월 각료회의 시 도출된 잠정 타협안 내용과 그 이후의 협상 진전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미합의 이슈에 대한 의장의 중재안을 포함하였다. 2008년 12월 각료회의 개최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 참여와 관련된 집중 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지않아 결국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비농산물 분야는 농업분야보다 품목 수가 많고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도 클 뿐 아니라, 개방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 및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세적인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협상 진전을 위해 입장이 유사한 그룹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3) 서비스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이 채택한 복수적 요청/양허 협상<sup>40</sup>이 두 차례(3월, 5월) 개최되었으며,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 계기에 각료급 Signaling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Signaling Conference에는 서비스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30여 개국이 참여하여, 각자의 양허 개선 가능 분야와 핵심 양허 요청 분야를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Mode 4, 통신, 금융, 유통 분야에서 양허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핵심 양허 요청 분야와 관련해서는 5대 인프라 서비스(금융, 통신, 해운, 유통, 건설)에 대한 양허 개선, 최혜국대우(MFN) 면제 리스트 삭제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향후 서비스 협상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서비스 텍스트가 채택되었다.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관련, 회원국들은 총 21개 복수적 요청/양허 협상그룹을 구성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해운, 통신, 금융 등 10개 분야에서는 양허 요청국으로, 법률, 시청각, 항공운송 등 9개 분야에서는 양허 요청 대상국으로 참여하였다. 각 회원국은 2005년 제출한 수정 양허안을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양자 간, 복수국 간 협상을 꾸준히진행하였다.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선도 산업이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제조 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신, 금융, 유통, 건설, 해운의 5대 인프라 서비스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동 분야에 대한 각국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 (4) 여타 협상분야: 규범,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환경

규범 협상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반덤핑 프렌즈 그룹<sup>50</sup>과 수산보조금 공조국 그룹<sup>50</sup>을 형성하여 반덤핑 조치의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축소와 균형 있는 수산보조금 규율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상반기 중에는 2007년 11월 30일 고메스 (Guillermo Valles-Galmes) 규범협상 의장이 회람한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협정(수산보

<sup>34)</sup> 복수적 요청/앙허 협상이란 말 그대로 각 서비스 분야별로 관심이 높은 복수의 국가들 간 협상으로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이들 국가들로부터 시장개방 요청을 받는 국가들 간의 협상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들로부터 시장 개방 요청을 받게 될 경우, 1대 양자협상에 비해 양허요청 대상국이 시장개방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효과가 있어 기존 양자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sup>35)</sup> 반덤핑 프렌즈 그룹은 우리나라, 일본, 칠레, 홍콩, 브라질,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코스타리카, 멕시코, 태국, 이스라엘로 구성되는 DDA 규범협상 반덤핑 분야 논의의 핵심 공조 그룹이다.

<sup>36)</sup> 한국, 일본, 대만, EC, 캐나다 등은 수산보조금 관련 공조국 그룹을 형성하여 제안서 제출, 공동 입장 정립 등 지속적으로 협의 를 강화하고 있다.

조금 분야 포함) 개정 의장 초안에 대해 5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008년 12월 19일에는 그간의 논의를 반영한 의장 제1차 수정안이 회람되었다. 동수정안에서는 제로잉 허용 등 우리에게 불균형적이었던 핵심 사안의 상당 부분이 철회되었고,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문안 작업을 보류하고 근본적인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여 우리의 핵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반덤핑 협정 개정에 있어서 제로잉 금지 등 규율 강화, 수산보조금 협정문 작업에 있어서 과도한 수산보조금 금지 억지 등 우리의 핵심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보호제도, 그리고 지식재산권 협정(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우리나라는 TRIPS 이사회 정례회의와 공식 및 비공식 협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환경 협상에서는 2008년 총 5차례의 특별회의와 1차례의 정례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 5, 8, 10조의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 수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과 함께 콜로라도 그룹 등 형성하여 무역원활화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한 해 동안 5회에 걸친 무역원활화협상에 참석하면서 그간 논의 결과 반영을 위해 우리 제안서 중 단일 서류접수 창구 관련수정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관련 타국 제안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그간 협상의 핵심 이슈가 되어왔던 대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sup>37)</sup> 콜로라도 그룹이란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결성되었다. 우리나라,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칠레, 홍콩,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모로코 등으로 구성된다.

# 009 외교백서 152

# 1.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교통상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적응과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전 재외 공관에 설치된 '통상·투자진흥종합지원반'의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동 지원반은 재외 공관과 업계 간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주재국에 수출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6개 시범 공관들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동 서비스 제공 공관 수를 1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2008년도 6개 시범 공관 자문 건수(총 610건)

공 관	주 <del>중</del> 국	주칭다오	주베트남	주광저우	주폴란드	주멕시코
	대사관	총영사관	대사관	총영사관	대사관	대사관
주요품목	331건	100건	133건	30건	11건	5건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민 관합동 통상사절단을 세계 주요 시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동 사절 단은 우리부가 파견 대상지역 및 시장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KOTRA, 무역협회, 중소기 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구성하고 있다. 2009년에는 통상투자사절단의 파견 회수를 더욱 확대하고, 파견지역도 기존의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sup>39)</sup>

한편 200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협력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개척이 어려운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농식품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농림부와도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재외 공관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농식품 수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399

또한 우리 기업들이 UN 조달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UN 조달시장설명회'를 민관합동으로 3차례 개최하였고, 2009년에는 제4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재외 공관이 보고하는 주재국의 경제·통상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각종 입찰정보 등을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통해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08년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미국 경제의 하강세, 금융시장의 혼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감소한 1조 6,0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역시 미국, EU 등 주요 투자국들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세계적 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 등 전반적 투자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대비 12~1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04년 급격히 증가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117.1억 달러로 전년(105.1억 달러) 대비 11.3% 증가하여 2004년(127.9억 달러)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sup>38) 1999-2008.12.19</sup> 현재 150여 개국 파견

<sup>&</sup>lt;sup>39)</sup> 주일(대) 바이어 초청 "한국 문화의 밤" 행사 시 1,350만 달러 수출 계약 체결

그럼에도 UNCTAD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각국의 GDP 대비 FDI 누계 비중은 세계 평균이 27.9%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12.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우리나라 FDI 유치 현황

(다의 · 배마부)

1-11-11-11-11-11-11-11-11-11-11-11-11-1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신고액	6,471	12,796	11,566	11,242	10,514	11,705			
도착액	5,116	9,274	9,606	9,075	5,266 (1-9월)	6,160 (1-9월)			
순유입액	4,384	8,980	7,050	4,950	715 (1-11월)	1,462 (1-11월)			

(출처 : 지식경제부)

이와는 달리, GDP대비 FDI 누계 비중이 40.9%에 달하는 EU의 경우 대규모 시장에의 접근성, 안정적 노사관계, 낮은 법인세, 개방과 관용의 문화, 투자유치 전담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이 투자 유치의 성공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FDI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아울러, 반(反)외자 정서의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Invest Korea 등을 중심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투자 유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된 국내 영업환경에 대한 해외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2009년에는 미국, EU 등 주요 투자국들의 경기침체 본격화와 세계적 기업들의 구조 조정 추진에 따른 전 세계 투자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전년도 수준의 FDI 실적을 달

DIPLOMATIC FOCUS

#### 🐯 재외공관의 주요 FDI 유치 성공 사례

- 주샌프란시스코(총): AMB Property사를 인천 자유무역지대에 6.6헥타르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 에 투자토록 하는 데 성공
- 주영국(대) : SAFC사와 경기도 간 MOU 체결(2007.11) 성사시킴. 현재 20백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코팅생산공장 건립을 추진 중
- 주말레이시아(대): Berjaya Group의 총 26억 달러 규모의 제주 관광레저 투자사업 유치에 성공 (2008.4)
- 주본분관: 2008년 10월 독일 ENMO사가 경북 문경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 및 1억 달러 투자 유치

- New York Telephone Telep										
년 도	투자설명회 및 IR 개최 지원	투자유치단 및 투자방한단 지원	잠재투자가 발굴/ 기투자가 접촉	외국인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 지원						
2005	205	331	322	94						

163

158

108

### 재외 공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실적(건수)

170

153

68

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는 FTA 및 투자협정체결 등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재외 공관을 통한 국내 제도 및 영업 환경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24

149

135

59

43

66

# 3. 경제·통상 정보 제공

2006

2007

2008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이 보고한 각국의 정부조달 및 입찰정보 등을 국내 유관 부처 및 경제단체, 기업 등에 제공하는 E-mailing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최근 시장 정보란 및 해외 입찰 정보란을 각각 개설하여 재외공관에서 보고한 각종 경제·통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40)</sup>

또한 2001년 12월부터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기업서비스란을 개설하여 우리 업체들과 재외국민들의 해외시장 관련 문의에 대해 고객지향형 1: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특히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들이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입찰 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하고 있다.<sup>41)</sup>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각국 시장에 대한 정보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해 각종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우선, 1998년부터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통상환경을 분석·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매년 발간하여 국내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42 또한 2008년에는 56개 재외공관에서 보고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이 통상마찰

<sup>40)</sup> 외교통상부와 MOU를 체결한 전경련, 대한상의, 해건협 등 33개 경제단체에 E-Mail로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총 698건의 정보 메일을 제공하였다

<sup>41) 2008</sup>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일본, 과테말라,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재외공관에서 1955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sup>42) 2008</sup> 보고서는 총 91개국에 대한 통상장벽 정보를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표준인증 등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투자, 환경, 경쟁, 정책, 금융 등 15개 분야별로 조사·분석 정리하고, 또한 국 기별 통상 환경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및 각종 애로사항 관련 89건의 사례를 수록한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을 발간 하여 해외 진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환경과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를 소개한 「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를 발간하였다.

# 4.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지원

#### 1) 여수박람회 개최 준비 현황

2007년 11월 27일 제14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총회에서 여수 유치가 확정된 이후, 체계적인 여수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2008년 3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이 공포·시행되었으며, 4월에는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장승우)가 출범하였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개최 준비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 위원회(위원장: 국무차장)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수조직위는 조직위정관 등 중요 사안 의 결을 위해 위원 총회와 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지원위, 위원총회, 집행위에 각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여수조직위 사무처에도 외교통상부에서 윤종곤 대외협력본부장 등 3명의 직원이 파 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 2) 외국의 여수박람회 참가 유치

2008년 5월 여수조직위가 여수박람회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여수조직위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08년 12월 2일 제144차 BIE총회에서 여수박람회가 BIE의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수조직위는 BIE회원국 및 국제기구등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여수박람회 참가 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부는 여수조직위와 함께 2009년부터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고, 참가 유치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여수박람회 참가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요

**※ 명 칭** 2012 여수세계박람회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88 기 간** 2012, 5,12-8,12(3개월간)

**८ 중 소** 전남 여수시 여수신항 일대(174만 m²)

박람회장 25만, 엑스포타운 54만, 엑스포역 16만, 환승주차장 44

만, 공원 및 기타 35만 등

❸ 주 제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지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

(The Living Ocean and Coast :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

**※ 참가자수** 100개 국가, 5개 국제기구, 10개 기업, 16개 지자체

**८ 관람객수** 약 800만 명(국내 745만 명, 외국 55만 명)

**❸ 기대효과** 생산유발 12,3조원, 부가가치 5.7조원, 고용유발 7만9천명

